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6. 9.

복지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발 의 자: 안대국 의원 외 6인(홍복조, 김화덕, 김태형, 원종진, 박왕규, 박정환)
- 발의일자: 2021. 5. 20.
- 회부일자: 2021. 5. 28.
- 상정 및 의결: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6. 9.)

## 2. 제정이유

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설치 및 기능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관리 및 위탁(안 제5조)
- 라. 운영위원회(안 제6조)
- 마. 운영시간 등,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, 이용료의 반환(안 제7조 ~ 안 제9조)
- 바. 자원봉사자(안 제10조)
- 사. 행위의 제한(안 제11조)
- 아. 지도점검(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: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
- 비용추계: 대상
- 입법예고(2021. 5. 20. ~ 2021. 5. 31.)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조례안은 현행 「아동복지법」에서 규정한 18세미만 아동(제3조제1호)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‘아동전용시설(법 제53조)’로서 <(가칭)달서아이꿈센터(이하 ‘센터’)>를 구 차원에서 새로이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. 동 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.
- 그러나 조례를 공포하면, 집행부는 시행일로부터 조례에 규정된 행정을 바로 펼쳐야 하는 바,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동 조례 제정의 적절성 여부까지 포함해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.

### 1) 의원 조례 발의 적절성 여부

- 집행부가 제출한 동 센터의 건축 개요 자료에 따르면, 집행부는 ① 달서구 죽전동 71-6번지에 ② 연면적 2,480.59㎡(지하1층, 지상4층) 규모의 센터를 2022년 2월까지 신축해 ③ 이 곳에 ④ 영아 실내놀이터(119㎡) 보드게임방(57㎡), VR체험실(120.12㎡)은 물론 ⑤ 장난감도서관(126.92㎡)·다함께돌봄센터(104.56㎡)·가족소리홀(153.68㎡)·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(89.32㎡) 등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(配置)할 계획.
- 그러나 조례안에서는 센터 위치를 “~관할 구역에 설치(안 제3조)”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며, 센터 내 세부 시설에 대해 “~실내놀이터, VR체험실,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(안 제2조제1호)”만 규정해, 장난감도서관,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집행부가 설치하려는 시설들을 제외하고 있는 바, 이는 집행부 행정 방향에 대하여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배분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 있음.

## 2) 센터 내부 시설인 <장난감도서관> · <다함께돌봄센터> 운영 방식 적절성 여부

- 안 제5조에서 동 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근거 규정을 마련. 집행부는 <장난감도서관> 및 <다함께돌봄센터>를 센터 내 (부속)시설로 운영할 계획인 바, 따라서 집행부가 선정한 본 센터 수탁자는 곧 이들 <장난감도서관>과 <다함께돌봄센터>의 수탁자가 됨.
- 그러나 동 센터 내 시설인 이들 <장난감도서관> 및 <다함께돌봄센터>경우, 현행 「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면서 집행부는 당시에 본 조례안의 센터 수탁자가 아닌 제3의 수탁자에게 이들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였던 바, 결국 본 조례안 규정은 현재 시행중인 위 2개 조례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.
- 따라서 동 조례안의 규율 대상(수탁자 포함)과 현 「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「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규율하는 대상(수탁자 포함)간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(정비)할 필요가 있음.

## 3) 안 제5조(관리 및 위탁)규정과 안 제10조(자원봉사자)규정의 적절성 여부

-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갖는 동 센터 운영 권한이 민간 수탁자에게 넘어 가고, 대신 센터 운영비용을 구가 지원하게 됨. 한편 자원봉사자 운용과 관련해서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, 자원봉사수요자는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수준의 금전적 지원은 할 수 있음.
- 그러나 조례안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을 (수탁자가 아닌) 집행부가 부담해 수탁자에게 자원봉사자를 지원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하도록 함은 결과적으로 현행 「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및 「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 규정과 상충될 개연성 있는 바,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
#### 4) 안 제8조(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)규정과 상위법 규정과의 적절성 여부

-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(제53조) 및 동법 시행령(제51조)에 따르면, “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”고 규정하여 이용료 면제를 원칙으로 (하되,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대상 폭을 넓게 하여) 동 시설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그러나 조례안(안 제8조)경우 위 상위법 취지와 달리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(제1항), 감면(減免) 규정은 없고 대신 면제(免除) 관련 규정은 마련했으나 그 대상 폭을 한정해 규정(제2항)한 바, 동 조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 논의도 필요.
- 한편, 안 제8조제1항에서 이용료 수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는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, 그 이용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, 현행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규정 취지와 상충될 개연성도 있는 바,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.

#### 6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